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방예산의 규모 문제가 그리고 92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축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논의 때마다 방위비 문제가 거론되는 배경은 첫째 방위비가 단일 항목으로서는 우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동서 냉전의 종식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국방비의 대폭적 축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문, 셋째 지금까지 국방기밀을 이유로 성역시되어온 방위예산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 중 얼마만큼이 국방에 투입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는 방위예산 외에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겠다.

우선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방위예산도 일반회계에 포함된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국방과 관련된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의 세출규모, 그리고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과 방위산업육성기금의 구성과 운용 내역도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방위비 예산 삭감

- 지난 16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 ○
- 국개발연구원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국민복지 수요의 충족을 이유 ○
- 로 방위예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앞서 전경련 부설 한 ○
- 국경제연구원도 방위비 축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종구 국방장 ○
- 관은 지난 17일자 어느 영자지와 회견에서 오히려 앞으로 3~4년 동안 ○
-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4.5%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방위비 삭감에 대한 찬반의견을 신는다. <편집자> ○

여타의 정부지출과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소비지출과 정부 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가 각각 1.46과 1.34인 데 비하여 국방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07이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민간 소비지출과 정부 소비지출이 각각 0.80과 0.87인 데 비하여 국방비 지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보면 군사비는 경제운용이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의 경제위기,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주도권 후퇴, 남미 여러 나라에서의 경제발전의 실패 등등이 모두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세계적 탈냉전 조류 속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국방에 대한 무관심 내지 경시 풍조마저 일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방위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보의 핵심적 요소인 국방비를 속죄양으로 삼아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현 여건에 비추어볼 때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

공백상태를 초래해 한반도에 무력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우리 군의 역할분담이 커짐에 따라 그만큼 방위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는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할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일본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휴전선 북방에 배치한 병력만 해도 93만명으로 한국군의 1.7배나 되며 22척의 잠수함과 7백90대의 항공기 등을 갖춘 채 북한은 최근에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이처럼 세계적인 냉전종식 추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북한이 폐쇄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침체로 내부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내총생산의 20~25%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무력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국방의 최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는 대북한 군사력 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

생산성 낮아 경제발전 장애

지출비중 세계6위...규모 재검토를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정부의 공식적 재정운용에 나타나지 않는 방위비 부담이 있다. 그 첫째가 강제징집제도 아래서 사병이 '무료'로 방위의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며, 둘째는 민방위와 예비군 훈련에 시간, 노력 그리고 물자가 투입됨으로써 감소되는 우리의 국민총생산이고, 셋째 방위산업에 대한



최 광
<한국외대 교수·경제학>

저명한 사상가인 드러커 교수는 최근의 저서 <새로운 현실>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비의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국방비를 다른 목적에 돌려 사용한다는 등의 단순한 사고와 발상은 충분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여건 속에서 국방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방위비 규모가 어떻게 책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규모의 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위제원에 대한 판단기준은 1986년까지는 국민총생산의 일정비율로 연동하였고 1987년부터는 투자비의 경우 방위비 규모로 하고 운영유지비의 경우 정부예산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위비 편성방식은 지금까지의 남북대치 여건 아래서는 불가피성이 다소 인정되나 앞으로의 경제운용과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곤란한 방식이다.

국방 당국은 과학적 방위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나로서도 그렇게 믿고 싶다. 문제는 국방관련 정보가 국민한테 공개되지 않는 데 있다. 국방백서가 발간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다는 낫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제는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방위예산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방위비의 내역중 낭비적인 것이 없는가, 방위비의 각 항목간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가, 방위비 지출이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 적극 연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국방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미군 단계철수 안보부담 커

북한 위협 여전...적정 비용 갖춰야

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국방개념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된 한국'의 국방에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국방정책은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적정선의 국방비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세계는 동서 냉전체제 와해에 따라 평화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남북한을 주축으로 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과거에 비해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적, 탈냉전과 평화 추세 속에서 한반도 주변환경이 우리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도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가안보를 소홀히 할 만큼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는 아니다.

더욱이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평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속에 이 땅에 전쟁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이란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과 군사적 위협이 엄존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냉전종식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는 열쇠가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평화 분위기가 힘의



나 병 선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예비역 육군중장>

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군사력을 많이 증강한 데 비해 우리는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국민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율은 88년 5.2%에서 89년 5%, 90년 4.3%, 91년 4%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

여왔다. 국민총생산 대비 평균 4.6%의 방위비를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당초 의도했던 대북한 군사력 격차 해소와 전쟁억지력 확보라는 국방정책 목표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국민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율은 외국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적은 것이다. 88년을 기준으로 미국 6.5%, 이란 7.9%, 시리아 11.9%, 북한 2.1.9% 등 각국의 방위비는 우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능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국민총생산 격차 추세를 감안해도 적정선의 국방비는 절대적으로 확보돼야만 한다.

국력은 비단 경제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역량도 아울러 갖춰야만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추호도 변함이 없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서 국방예산은 바로 국민 각자의 생존 자체를 위한 기본경비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오늘의 우리의 냉엄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국방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국방정책을 포기하자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